

한반도 공동번영의 조건

김석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kimsj@kinu.or.kr

한반도 신경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흔히 하는 이야기는 남북 양측에 다 좋다는 것이다. 저성장 경로에 들어선 남한은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고, 북한도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제경제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상적, 원론적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다. 그러나 구체적, 세부적으로는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다.

노동집약 제조업의 한계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인 개성공단을 보자. 개성공단은 남한의 노동집약 제조업체들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수익의 원천이 저임금에 있으므로 북한이 버는 소득은 많지 않다. 사업이 확대되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면 북한이 버는 소득은 과거의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연간 몇 억달러밖에 안 되니 북한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긴 어렵다.

남한경제가 얻는 이익도 역시 제한적이다. 남한기업에게 개성공단은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 공단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수많은 남한기업이 저임 노동력을 찾아 개도국 공단에 계속 진출하고 있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개성공단은 임금이 더 싸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개도국에 진출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개성공단 사업의 순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하긴 어렵다. 다른 개도국 사업에도 여러 장점이 있고 거기서 더 큰 이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은 남한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지역 중 하나에 불과하며 개성공단이 없어도 해외 개도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개성공단 사업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만, 남한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자본·기술 집약 사업 가능할까

현재의 개성공단 방식인 저임금 저부가가치 노동집약 제조업보다 수준 높은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도 자주 나온다. 북한은 과학기술 수준이 높고 고급 기술인력이 많으니 정보통신 같은 첨단산업을 해보자, 그래서 북한 당국이 갈망하는 '단번 도약'을 이뤄보자는 아이디어다. 북한의 기술과 인력 수준이 정말 높은지는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같은 나라에서 수준 높은 사업, 즉 자본·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자본·기술 집약 제조업을 생각해 보자. 이런 산업은 최소 필요 투자 규모가 매우 크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시설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또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고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연결되어야 하며, 그 네트워크는 범세계적이다. 자본·기술 집약 제조업이 활동하는 기업 생태계는 노동집약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회정치적 환경과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어야 한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이런 조건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준 높은 사업은 선진국과 일부 중상위 소득 국가에서나 가능할 뿐,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전자·정보통신 분야 제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실은 저임 노동력을 활용해 해당 산업의 노동집약 공정을 가동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정도 사업환경을 갖추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이 쉽다면, '단번 도약'이 쉽다면, 왜 지금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개도국으로 남아 있겠는가.

북한의 기술인력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 것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한계도 뚜렷하다. 북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이유 역시 북한의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을 잘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은 남한에도 중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많다. 북한의 기술인력에게 봉급을 많이 줘야 한다면 굳이 북한에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기술인력은 생산직 노동자보다는 훨씬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술인력의 수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업을 통해 북한이 벌 수 있는 소득은 제한적일 것이다. 북한의 기술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남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기업은 싼 인건비 덕분에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나 사업 규모가 커지면 남한의 기술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이 버는 이익과 기술인력이 입는 손해 중 어느 쪽이 클지 장담하긴 어렵다.

물류, 관광, 자원 개발 이익도 제한적

물류, 관광, 지하자원 개발 사업에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의선 고속철 구상을 생각해 보자. 경의선 고속철을 건설하면 중국 고속철도망과 연결되어 한중간 여객·화물 수송 여건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고속철은 너무 비싼 수송 수단이어서 북한사람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 북한의 소득수준이 꽤 올라가고 북한경제가 더 활성화될 때까지 오랫동안 경의선 고속철은 북한경제와 별 상관없는, 한중 물류를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통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며 북한 당국이 이를 얼마나 값있게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같은 대륙물류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광은 어떨까. 세계적으로 관광업은 흥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아시아 관광업은 더욱 호황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북한도 관광으로 큰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지금으로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광에서 큰돈을 벌려면 관광객들이 쇼핑을 많이 해야 하고 즐길 거리가 많아야 한다. 북한은 자연 관광자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쇼핑할 것은 많지 않고 문화·오락 사업도 발달해 있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은 자유롭지 않은 나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놀 수 없는 나라, 관광객들도 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다녀야 하는 나라다. 이런 환경의 관광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하자원 개발은 가장 무리한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북한에 지하자원이 많이 묻혀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은 수익성이 낮은 자원이거나 수요가 많지 않은 자원이다. 대표 자원인 무연탄은 중국의 수입 수요 덕분에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에 상당한 외화벌이를 가능케 해주었다. 그러나 무연탄은 값싼 자원이어서 수익성이 높지 않다. 한때 가격이 올라 꽤 수익이 나긴 했지만 지금은 다시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무연탄은 수요도 많지 않다. 세계시장의 석탄 수요는 북한에 없는 역청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자원인 철광석은 매장량은 많지만 품위(총중량 대비 유효중량 비율)가 너무 낮아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희토류를 비롯해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다른 자원들도 세계시장 수요가 제한적이고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마지막 희망은 석유나 가스를 발견하는 것이지만,

석유 탐사는 매우 리스크가 큰 사업이며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개혁 개방해야 공동번영 가능

한반도 공동번영의 이상을 성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남북한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마도 상당 기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남북경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하나 하나는 그리 대단치 않더라도 여러 사업을 합쳐 보면 남북한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꽤 커질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 공동번영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성취하려면, 뭔가 더 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모범 사례는 아무래도 중국 개혁 개방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베트남 사례도 세부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중요한 요점은 중국과 비슷하다). 중국경제의 성공을 설명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새로 생겨난 수많은 국내 사기업(私企業)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진정한 주역이었다는 점이다. 초기에 농촌 집단소유제 기업의 탈을 쓰고 나타난 사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사기업 합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 같은 근본적 개혁에 힘입어 더욱 번성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핵심적 개혁은 노동개혁, 즉 사회주의적 노동통제의 철폐와 노동시장 형성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과거보다는 크게 확대된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런 개혁은 외자기업에도 훨씬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했다. 노동시장이 발달해 인력 활용 여건이 좋아졌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사기업과 국유기업이 발달해 외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가 확장되었다. 거시경제 안정화, 상업금융 시스템 발달, 외환관리제도 정비 같은 여타의 개혁도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에 공히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했다. 대외무역, 경제특구, 외자기업 유치에서 중국경제가 얻은 이득은 갈수록 커졌는데, 이는 대외경제와 국내경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성공 스토리는 개혁과 개방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신경제의 미래도 북한이 국내체제 개혁을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를 폭넓게 허용하고 국영경제 관리방법 개선을 도모하는 등 과거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개혁 수준은 과거 중국의 경우에 비해 훨씬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북한이 더 과감한 개혁 없이 개방만 확대한다면, 다시 말해 특구 중심의 부분적 개방이나 외부의 원조와 투자에만 의지한다면 북한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며, 남한경제와 기업이 얻는 이익 역시 대단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까지 적극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추진한다 해도 시일은 오래 걸릴 것이다. 남북경협에서 남한 기업이 직면할 비즈니스 환경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사업도 여건을 따져가며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밋빛 미래만 꿈꾸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 경제발전의 주체는 북한 당국, 북한 기업, 북한 주민이라는 것, 남한 정부와 기업이 북한을 대신 발전시켜 줄 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